

POLITICS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광주 음식물류폐기물 줄인다 28억 투입...5년간 7650t 감량

광주시가 음식물류폐기물 연 1530t씩 5년간 총 7650t을 감량한다.

광주시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28억원을 투입해 RFID(전자태그)·감량기 설치, 가정·사업장 발생원 억제, 교육·홍보 등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동주택 RFID 종량기를 3만6000세대에 총 510대 보급한다.

RFID 종량기는 무선주파수 시스템을 통해 음식물 배출량을 세대별로 측정하고,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한다. 감량 효과가 뛰어난 것은 물론 시민들은 발급 받은 카드를 사용해 음식물을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다.

음식점·집단급식소 등 음식물류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는 감량기 15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감량기는 배출원에서 직접 건조·발효 등 방식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한다. 감량 효과가 크고, 남은 부산물은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발생원 억제 강화를 위해 공동주택 감량경진대회, 목표관리제 등 시민참여 정책을 확대한다.

시민들이 스스로 가정과 사업장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고, 지난해 대비 발생량이 줄어든 곳에 인센티브를 준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대형마트와 지역 푸드뱅크를 연계한 신선식품 기부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등 새로운 감량 정책에도 힘쓸 예정이다.

시는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전문강사들과 함께 학생,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을 연 250회로 확대하고 폐기물 처리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현장 견학도 늘릴 방침이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많은 명절·김장철 등에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교육청·한국외식업중앙회 등과 협력해 업종별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도. 동계전략작물 직불금 접수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서

전남도는 동계전략작물 직불금 신청이 오는 31일 마감됨에 따라 지급 대상 농업인은 빠짐없이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략작물 직불금은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겨울철 논에 보리, 밀, 조식료를 여름철에는 두류, 가루쌀, 하계조식료 등을 재배할 경우 품목에 따라 ha당 최대 50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000㎡ 이상의 논에서 작기별로 보리·밀, 하계조식료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다.

품목별 ha당 지급단가는 겨울철에 보리·조식료 50만원, 밀 100만원, 여름철에 옥수수·깨 100만원, 두류·가루쌀 200만원, 조식료 500만원이다.

또한 겨울철에 밀, 조식료를 재배하고 여름철에 두류, 가루쌀을 이모작 재배하면 ha당 10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받는다.

올해부터 동계 밀은 ha당 50만 원에서 100만원으로, 하계조식료는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직불금 단가가 인상됐다. 신규로 하계(참깨·들깨)를 재배하면 ha당 100만원의 직불금 지원한다.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직불금은 자적검증과 이행점검(동계작물 4~6월·하계작물 7~11월)을 확인한 후 12월경 지급된다. 이현규 기자

4·2 담양군수 재선거 후보토론회 열기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담양군수 재선거에 나서는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25일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재종 “예산 확보 총력...열악한 재정 극복” 정철원 “정주환경 등 개선 출산율 올리겠다”

현금 지원성 공약, 재원 확보 방안 등 집중 질의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담양군수 재선거에 나서는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가장 시급한 지역현안으로 예산확보와 출산율 대책을 각각 꼽았다.

25일 오후 담양군수 재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종 후보와 기호 3번 조국혁신당 정철원 후보는 담양군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본격적인 토론회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이재종 후보는 “이번 담양군수 재선거는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 될 것이다”며 “민주정부 탄생의 시금석이 되고, 잠재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일평생 담양을 지켜온 흙수저로 새로운 정치 혁신을 위해 이번 선거에 나섰다”며 “담양의 새변화를 위해 군민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드높이고 혁신하는 담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으로 열악한 재정에 따른 예산확보를, 정 후보는 출산율 대책을 꼽았다.

이 후보는 “담양군 재정상태는 매우 심각하고 재정자립도도 매우 낮은 실정이다”며 “예산 대부분이 국도비에 의존하는 상황인데, ‘힘 있는 군수’로서 담양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담양의 출산율은 전남 기

초단체들의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반대로 고령화는 계속 심각해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다”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 게 만원주택 같은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교육하기 좋은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 후보는 ‘지역 토박이론’을 앞세워 이 후보를 간접적으로 공격했다.

그는 “이 후보는 ‘담주리 마을 속원 사업’이 뭔지 아느냐”고 지역 세부 민원 사항을 물으며 이 후보의 지역 연고의 취약성을 간접적으로 공격했다.

이 후보는 “담주리 마을 현안보다 더 큰 문제가 많이 있다”고 공격을 넘긴 후 “담양군 의회 의정직을 유지하며 피감기관의 장인 군수직에 출마했고, 경력에 민주당 이력을 기재했다”며 “3선 군

의원 재직 시절 조례 발의나 군정 질문은 몇 차례나 했느냐”고 역공했다.

두 후보는 각각의 세부 공약에 대해서도 서로 견제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담양 △교육특례군 담양 △질사 부자농촌 △담양교통혁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후보는 △내륙 관광 1번지 생태정원문화도시 △행복한 삶이 있는 삶터·힐터·일터 △소득이 있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도농 융합 경제자립도시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정 후보의 군청사 신축이전 방안의 재원 확보 방안과 청사 이전에 따른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지적했다.

이 후보가 공약한 18세 미만 영유아·청소년 교육·의료비 전액 지원방안, 마을요양원 설립 등 현금 지원성 공약에

대해서도 재원 조달 방안을 따졌다.

정 후보는 이 후보의 1000억대 국책사업 유치 공약에 대해 “예산 확보 방안은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담양 △교육특례군 담양 △질사 부자농촌 △담양교통혁명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 후보는 “저는 담양을 품고 세상으로 나갔고, 이제 세상을 품고 담양으로 돌아왔다”며 “어려분과 함께 기쁘고 풍요롭게 바라는 변화와 혁신을 군민들의 지지를 모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후보는 “담양 군수가 되어 3년이 내 군의원으로 당선시켜준 담양 군민들에게 보답하겠다”며 “담양군민이 절실하게 바라는 변화와 혁신을 군민들의 지지를 모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담양=조성우 기자 jnnews@gwangnam.co.kr

조인철 “도심융합특구 참여기업 세제감면”

개정안 발의...“유명무실 특구에 ‘기업 참여 유인책’ 지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방위·사자)은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5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방 대도시를 첨단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혁신 거점이다.

광주·대구·대전·부산·울산 등 5개 광역시가 지난 2020년 선정됐으며, 구도심을 재개발해 산업·주거·문화·연구가 결합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

여가 부족해 실질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취득세·재산세·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해 기업들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기존의 지방 투자 유치 지원책이 주로 대기업 중심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창업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에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또 세제 혜택만 받고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 철수하는 기업은 감면된 세금을 환수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기업 유치 → 일자리 창출 → 인구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조인철 의원은 “도심융합특구가 지역경제를 살릴 혁신 거점이 되려면, 기업이 들어와야 하고 사람들이 몰려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창업과 투자를 촉진하고, 도심융합특구가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제 지역구인 광주 삼부지구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만큼, 법 개정뿐만 아니라 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기업 유치와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광주가 청년 창업과 투자 중심지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광주시, 147억 투입 상반기 중 포트홀 복구 완료

자동차전용도로·일반도로 등 19개 노선 31.8km 재포장

겨울철 도로파임(포트홀)으로 파손된 광주시에 주요도로 19개 노선과 포트홀 다발구간에 대한 재포장 공사가 상반기 중 완료된다.

광주시는 총 사업비 147억원을 투입해 도로 재포장 공사 등을 시행, 상반기 중 도로파임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광주시는 우선 사업비 88억원을 들여 하남진곡산단로·빛고을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4개 노선과 상무대로·아동대로 등 일반도로 15개 노선 등 총 19개 주요도로 31.8km 구간(1차로 환산 약 127km)을 전면 보수 대상으로 선정해 4월 말까지 도로

재포장 공사를 집중 시행, 6월 말까지는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서 도로파임(포트홀) 복구 위치 데이터를 구축, 노선별 발생 현황과 파손유형 등을 분류해 전면보수 대상지 등을 확정했다.

광주시는 또 전체 도로에 산재된 ‘소규모 포트홀 다발구간’은 응급보수 기동반을 투입, 도로파임 긴급보수를 진행하고, 일부 재포장할 계획이다. 실제 광주시는 올해 9개소 27명으로 도로파임(포트홀) 응급보수기동반을 구성해 주·야간 구분 없이 24시간 가동, 3월21일까지 총 1만 3767개의 포트홀을 보수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 등으로 겨울철 도로파임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광주시가 관리하는 도로(왕복 4차로 이상)에서 발생한 도로파임 건수는 지난 2022년 1만429건, 2023년 2만3448건, 2024년 3만3822건, 2025년(3월21일 기준) 1만3767건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이에 따른 광주시 도로유지관리 예산도 2022년 78억원, 2023년 106억원, 2024년 94억원, 2025년 147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올 겨울철 내린 날이 줄고 선제 대응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도로파임이 2% 줄고 사고 건수도 67% 감소했다”며 “재포장 등 복구공사를 올 상반기 내 마무리해 도로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전남선관위, 4·2재보궐선거 투표소 30곳 확정

투표시간 보장 안 하면...최대 1000만원 과태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4·2재보궐선거의 투표소 30곳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세대에는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물, 거소투표신고자 291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30곳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담양군수재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

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4·2재보궐선거 기간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업주는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3월 28일~29일)과 선거일(4월 2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조의 2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3월 26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30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초등생 1300여명 구강건강 서비스

광주시는 초등학생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아동 치과주치의 서비스’를 운영한다.

광주시는 2014년부터 예산을 투입해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만6033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1억6000만원을 투입해 1332명의 초등학생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1300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예방진료,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이다. 보건소와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예방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동민 기자